

2024년 1월 13일 시행

제30기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응시번호	
성명	

【인문사회계열 : 선택과목】

선택유형	선택과목 (1)	선택과목 (2)	선택과목 표기 (○)
1	행정학	민법총칙	
2	행정학	형사소송법	
3	행정학	경제학	
4	행정학	소방학개론	
5	민법총칙	형사소송법	
6	민법총칙	경제학	
7	민법총칙	소방학개론	
8	형사소송법	경제학	
9	형사소송법	소방학개론	
10	경제학	소방학개론	

※ 안내사항

1. 원서접수 시 선택한 선택과목 (1), 선택과목 (2)를 “선택과목 표기”란에 ○ 표기해 주십시오.
2. 원서접수 시 선택한 선택과목 순서대로 답안지가 채점되므로 시험지와 답안지의 선택과목 (1), 선택과목 (2)의 순서가 동일한지 확인해 주십시오.
3. 선택과목의 페이지 수를 확인한 이후에 문제를 푸십시오.

※ 본 시험지는 총 35 페이지입니다.

행정학	민법총칙	형사소송법	경제학	소방학개론
1~6페이지 (총 6페이지)	7~12페이지 (총 6페이지)	13~25페이지 (총 13페이지)	26~30페이지 (총 5페이지)	31~35페이지 (총 5페이지)



소방청
National Fire Agency

【 행정학 】

1. 신행정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현실의 사회문제 해결을 강조하였다.
- ② 가치지향적 관리를 중시하였다.
- ③ 정책보다는 논리실증주의에 초점을 두었다.
- ④ 실천성과 적실성의 회복을 강조하였다.
- ⑤ 행정이 사회적 형평성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 관료제의 문제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훈련된 무능(trained incapacity)이란 관료가 기존 및 변화된 상황에서 모두 무능력하여 부적절한 결과를 가져왔음을 뜻한다.
- ② 관료제의 권력집단화 경향에 의해 국민에 대한 둔감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 ③ 번문옥례(red tape)란 국민의 요구보다 규칙·절차만을 지나치게 중시하는 것을 뜻한다.
- ④ 목표대치(goal displacement)란 관료들이 법규의 엄격한 적용과 준수의 강조로 목표보다 수단을 더 중시하는 것을 뜻한다.
- ⑤ 관료를 수동적인 존재로 만들거나 관료가 창의적으로 행동할 기회가 적기 때문에 능력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3. 에머리(Emery)와 트리스트(Trist)가 구분한 조직환경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정적-집약적’ 환경의 예로는 독과점이 대표적이다.
- ② ‘격동의 장’에서는 계획을 통하여 환경변화를 예측하는 것이 용이하다.
- ③ ‘교란-반응적’ 환경의 예로는 1차 산업의 환경등이 있다.
- ④ ‘교란-반응적’ 환경보다 ‘격동의 장’에서의 불확실성·복잡성이 더 높다.
- ⑤ ‘정적-임의적’ 환경에서는 각 조직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경쟁한다.

4. 다음 제시문이 설명하는 조직이론은?

조직과 환경의 관계에서 조직은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주도적·능동적으로 행동한다. 조직은 환경을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관리하려는 존재이다. 조직과 환경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조직에 의한 전략적 선택이다.

- ① 거래비용이론
- ② 상황적응론
- ③ 조직군생태론
- ④ 인간관계론
- ⑤ 자원의존이론

5. 국가공무원의 직권면직과 직위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 ㄱ. 임용권자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여 직위 해제된 자에게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할 수 있다.
- ㄴ. 임용권자는 예산의 감소에 따라 과원(過員)이 되어 직권면직시킬 경우에는 미리 관할 징계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ㄷ. 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성적이 극히 나쁘다는 사유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사유가 경합(競合)할 때에는 근무성적이 극히 나쁘다는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 ④ ㄴ, ㄷ ⑤ ㄱ, ㄴ, ㄷ

6. 중앙인사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위원회형은 독립성과 합의성을 중시한다.
- ② 미국의 실적제보호위원회(MSPB)는 비독립합의형에 해당한다.
- ③ 위원회형은 비독립단독형에 비해 책임소재가 분명하다.
- ④ 소청심사 등 준사법기능은 중앙인사기관의 기능으로 볼 수 없다.
- ⑤ 비독립단독형은 위원회형에 비해 인사행정의 계속성을 더 보장한다.

7. 품목별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투입 중심이기 때문에 지출에 따른 효과는 제대로 고려되지 않는다.
- ② 회계 책임을 분명히 할 수 있고, 지출을 통제하는 것이 용이하다.
- ③ 미국에서는 1900년대 초반 행정의 절약과 능률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 ④ ‘무엇을 위한 지출인가’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 ⑤ 예산을 집행할 때 재량권의 범위가 제약되기 때문에 신축적이지 못하다.

8. 「국가공무원법」상 경력직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② 비서관
- ③ 소방공무원
- ④ 검사
- ⑤ 국가정보원 직원

9. 국가공무원의 적극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이다.
- ②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될 경우 특별승진이나 특별승급 등의 인사상 우대 조치를 부여받을 수 있다.
- ③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는다.
- ④ 적극행정위원회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수사례 선정과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 ⑤ 적극행정의 주무부처인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적극행정 실행계획과 그 성과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0. 근무성적평정의 타당도, 신뢰성, 수용성을 저해하는 요소로서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평가자가 피평가자들에게 중간이나 평균치(보통) 정도의 점수를 주는 심리적 경향을 말한다.

- ① 연쇄 효과(halo effect)
- ② 역산식(逆算式) 평정 관행
- ③ 집중화 경향(central tendency)
- ④ 선입견과 편견
- ⑤ 근접 효과(recency effect)

11.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공무원 교육훈련 방법은?

이 방법은 2005년에 중앙공무원교육원 고위정책 과정과 신입관리자 과정 훈련에 적용되었다. 행동하면서 학습하는 이 교육훈련 방법은 교육참가자들이 소그룹 규모의 팀을 구성해 개인, 그룹 또는 조직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실제 현안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문제해결 과정에 대한 성찰을 통해 학습하는 방식이다.

- ① 감수성훈련
- ② 역할연기
- ③ 신디케이트
- ④ 사례연구
- ⑤ 액션러닝

12. 「국가재정법」상 예산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부는 예산과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국민부담의 최소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③ 정부는 재정건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④ 정부는 재정을 운용할 때 재정지출 및 조세지출의 성과를 제고하여야 한다.
- ⑤ 정부는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포함하여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 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3. 엘리슨(Allison)의 정책결정모형에 포함되는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 기>	
ㄱ. 합리적 행위자 모형	ㄴ. 점증모형
ㄷ. 조직과정모형	ㄹ. 관료정치모형
ㅁ. 쓰레기통모형	

- ① ㄱ, ㄴ, ㅁ ② ㄱ, ㄷ, ㄹ ③ ㄴ, ㄷ, ㄹ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14. 「국가공무원법」상 복무에 관한 규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집단 행위의 금지
 ② 청렴의 의무
 ③ 정치 운동의 금지
 ④ 복종의 의무
 ⑤ 이해충돌 방지의 의무

15. 우리나라의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책임운영기관은 중앙책임운영기관과 소속책임운영기관으로 구분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별도의 평가단을 구성하거나 지정하여 평가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특별회계의 예산 및 결산은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의 조직별로 구분할 수 있다.
 ④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일체의 임용권을 가진다.
 ⑤ 소속책임운영기관은 정원의 일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16. 우리나라 소청심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도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②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않고 제기할 수 있다.
 ③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원징계부가금 부과처분보다 무거운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는 별도의 소청심사위원회를 두지 않는다.
 ⑤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 행정청을 기속하지 않는다.

17. 다음 중 시장실패를 유발하는 원인이 아닌 것은?

- ① 자연독점
 ② 정보의 비대칭성
 ③ 외부효과
 ④ X-비효율성
 ⑤ 불완전경쟁

18. 무의사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엘리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요구는 정책문제화하지 않고 억압한다.
 ② 무의사결정을 위해 정치체제 내의 지배적 규범이나 절차를 강조하여 변화나 혁신적 주장을 억제하기도 한다.
 ③ 무의사결정의 행태는 정책과정 전반에서 일어날 수 있다.
 ④ 엘리트들은 직접 정책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힘이나 영향력, 권위에 의해 해당 정책을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다.
 ⑤ 엘리트들의 가치중립적 행동을 강조한다.

19. 대표관료제의 장점이 아닌 것은?

- ① 실적주의 강화
- ② 행정의 대응성 향상
- ③ 외부통제 약화 현상의 개선
- ④ 사회적 형평성 제고
- ⑤ 국민 대표성 강화

20. 「정부조직법」상 국가행정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기획재정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각각 겸임한다.
- ② 인사혁신처는 국무총리 소속이다.
- ③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보안 및 중대범죄 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정보원을 둔다.
- ④ 행정안전부의 안전·재난 업무 담당은 소방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⑤ 재외동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둔다.

21. 법률상 주민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할 수 있는 자치법규로서의 규칙(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의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 ② 지방의회는 주민청구조례안이 수리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여야 한다.
- ③ 행정기구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
- ④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은 주민조례청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 ⑤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22.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징계가 아닌 것은?

- ①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 ②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 ③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 ④ 자격심사에 따른 자격상실 의결
- ⑤ 제명

23.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내부수익률은 순현재가치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 ② 순현재가치는 편익의 총현재가치에서 비용의 총현재가치를 뺀 것이다.
- ③ 비용편익비가 1보다 크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할인율을 낮게 적용할수록 편익의 미래 가치를 과소평가할 수 있다.
- ⑤ 사업 및 정책의 성과 여부를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측정하는 방법이다.

24. 사회적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경제자본에 비해 형성과정이 투명하고 경계가 명확하여 상호 간 거래가 촉진된다.
- ② 공유되는 행동 규범과 문화적 정체성이 중요하다.
- ③ 시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생산되는 무형의 자본을 의미한다.
- ④ 공동이익을 위한 상호조정과 협력을 촉진한다.
- ⑤ 사회적 관계에서 거래비용을 감소시켜 준다.

25. 우리나라의 전자정부와 지능정보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의 구현·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전자정부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행정기관 등의 장은 5년마다 해당 기관의 전자정부의 구현·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③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된 행정정보일지라도 공동이용센터를 통한 공동이용 대상정보에서 제외할 수 없다.
- ④ 지속적인 전자정부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6월 24일을 전자정부의 날로 정하였다.
- ⑤ 지능정보화책임관은 해당 기관의 지능정보사회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 업무와 지능정보화사업의 조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총괄한다.

【 민법총칙 】

1.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신의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이다.
- ② 신의칙의 내용은 법원의 재판활동으로 구체화된다.
- ③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을 위반하지 않는다.
- ④ 당사자의 주장이 없을 때에도 법원은 직권으로 신의칙의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 ⑤ 취득시효가 완성한 사실을 모르고 그 토지에 관하여 어떤 권리도 주장하지 않기로 약정한 점유자가 시효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2. 태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모(母)는 태아를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② 태아를 수증자로 하는 유증은 효력이 없다.
- ③ 타인의 불법행위로 태아가 출생하지 못한 경우 모(母)는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한다.
- ④ 부(父)는 태아를 인지할 수 있다.
- 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3. 실종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이를 청구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 ② 실종자가 귀환하면 실종선고는 즉시 효력을 잃는다.
- ③ 부재자에게 선순위상속인이 있으면 후순위상속인은 실종선고를 청구할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
- ④ 실종자가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와 다른 시기에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이미 개시된 상속은 그 효력을 잃는다.
- ⑤ 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 이를 직접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선·악의를 가리지 않고 그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하여야 한다.

4. 미성년자의 상대방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그가 이미 동의한 법률행위를 대리하지 못한다.
- ②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다.
- ③ 악의의 상대방도 주인이 있을 때까지 미성년자의 단독행위를 거절할 수 있다.
- ④ 상대방이 혼인한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상대방은 의사표시를 철회하지 못한다.
- ⑤ 선의의 상대방은 주인이 있을 때까지 미성년자에게 유효하게 철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5. 미성년자 甲은 그의 법정대리인 乙의 동의없이 丙과 고가의 자전거를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丙은 甲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가 미성년자임을 몰랐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甲은 미성년을 이유로 丙과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② 丙의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乙은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③ 丙은 乙이 추인할 때까지 그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 ④ 甲이 속임수로 자신을 성년자로 믿게 한 때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⑤ 丙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乙에게 추인 여부의 여부를 촉구한 경우, 乙이 그 기간 내에 응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6.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법인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 임의로 설립하지 못한다.
 - ② 법인은 상속인으로 지정될 수 없다.
 - ③ 법인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 법인은 가해자에게 그 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 ⑤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산 당시의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7. 법인의 이사와 감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퇴임한 이사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지 않은 법인은 그 이사가 종전의 직무에 관하여 한 행위의 무효로 선의·무과실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②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포괄적으로 대리하게 할 수 있다.
 - ③ 이사가 여러 명일 때에도 이사회를 구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④ 이사의 부존재 또는 결원으로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로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 ⑤ 감사는 임의기관이다.

8. 재단법인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보 기>—

- ㄱ. 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 ㄴ. 재단법인 설립자는 착오를 이유로 설립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 ㄷ. 재단법인의 설립은 정관의 작성과 재산의 출연을 요건으로 한다.
- ㄹ. 재단법인이 소멸하는 경우 잔여재산을 다른 재단법인에 분배하는 정관 조항은 효력이 없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ㄷ, ㄹ

9.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고유한 의미의 종중은 자연발생적 종족집단이므로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 ②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들이 2개의 독립된 사단으로 나뉘어 종전 사단의 재산을 공동소유하는 방식의 사단분열은 인정되지 않는다.
- ③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그 사단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④ 법인 아닌 사단의 정관이나 규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사원총회의 결의를 얻지 않은 총유물의 처분행위는 무효이다.
- ⑤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가 일부 교인들의 탈퇴로 분열된 경우 종전 교회의 재산은 잔존 교인들과 탈퇴한 교인들의 공유이다.

10.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 물권이다.
- ② 부동산은 종물이 될 수 없다.
- ③ 주물의 소유자가 아닌 자가 주물에 부속한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
- ④ 주물 위에 설정된 담보물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설정 후의 종물에 미치지 않는다.
- ⑤ 적법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농작물을 경작한 자는 명인방법을 갖추어야 그 농작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11. 甲이 그 소유의 X주택을 乙에게 매도하였다. 甲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전에 그 사정을 잘 아는 丙은 망설이는 甲에게 X주택을 그에게 매도할 것을 적극권유하였다. 甲은 X주택을 다시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乙은 甲에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ㄴ. 乙은 甲과의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ㄷ. 乙은 丙에게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ㄹ. 丙으로부터 X주택을 매수·취득한 제3자는 그가 선의일 때에도 甲과 丙의 매매계약의 유효를 乙에게 주장할 수 없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ㄱ, ㄴ, ㄷ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12.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통정허위표시로 채권을 양도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양도행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 ② 통정허위표시는 무효이므로 그 당사자는 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
- ③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 ④ 통정허위표시로 매매한 매도인은 그 사실을 모르고 목적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를 한 제3자에게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있다.
- ⑤ 통정허위표시자는 통정허위표시의 사실을 모른 제3자로부터 그 행위의 목적물을 양수한 전득자가 악의일 때에도 그에게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하지 못한다.

13. 제3자의 사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상대방이 사용자책임을 져야 하는 그의 피용자도 제3자가 될 수 있다.
- ② 제3자의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면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이다.
- ③ 제3자의 사기로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를 한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④ 제3자의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는 이를 취소하지 않고 제3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상대방의 대리인의 사기로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한 표의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14.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우편물이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우편물이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
- ②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없이 수령을 거부한 때에도 그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있으면 의사표시의 도달이 인정된다.
- ③ 사단법인 총회소집의 통지에는 발신주의가 적용된다.
- ④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일 경우 제한능력자는 그가 수령한 의사표시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 ⑤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모르는 경우 그는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 규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송달할 수 있다.

15.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임의대리의 경우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할 때까지 수권행위를 철회하지 못한다.
- ② 본인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판단할 때에 무경험, 경솔, 궁박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한다.
- ③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대금청구권과 소유권이전의무만이 아니라 하자담보권과 취소권도 직접 본인에게 귀속한다.
- ④ 임의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⑤ 본인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한 대리인은,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할 권한을 가진다.

16.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그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 ② 복대리권의 범위는 대리권의 범위와 일치하여야 한다.
- ③ 대리권이 소멸한 때에도 복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④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에 표현대리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
- ⑤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대리인은 본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17.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표현대리의 법리는 공법상 대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② 상대방이 유권대리를 주장한 경우 이는 표현대리의 주장을 포함한다.
- ③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대리권 없는 자의 법률행위가 유권대리로 전환된다.
- ④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
- ⑤ 사실혼관계의 부부 일방은 일상가사에 관한 대리권이 없으므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18.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본인은 무권대리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할 수 있다.
- ② 의사표시의 일부에 대한 본인의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무효이다.
- ③ 본인이 추인하면,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무권대리행위는 그 법률행위를 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 ④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본인이 매매대금의 일부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본다.
- ⑤ 무권대리인에게 추인의 의사표시를 한 본인은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도 그 상대방에게 추인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19.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취소한 경우 대금반환청구권은 매매를 취소한 때부터 10년의 시효로 소멸한다.
- ②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취소한 경우 소유물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취소권을 행사한 때부터 진행된다.
- ③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가 그 취소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표의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④ 일부취소에 관하여는 일부무효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유추적용된다.
- 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20.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사회질서의 위반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기 위하여는 그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급부가 이루어져야 한다.
- ② 무효의 가등기를 전용하기로 약정한 경우 가등기는 처음부터 효력을 가진다.
- ③ 폭리행위로 무효인 법률행위도 유효한 법률행위로 전환될 수 있다.
- ④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이는 그 자체로 유효한 법률행위가 된다.
- ⑤ 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일반 소멸시효기간이다.

21.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조건부 권리에 관하여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
- ②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③ 해제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의 성취로 효력이 생긴다.
- ④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의 경우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조건성취를 증명하여야 한다.
- ⑤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을 위반하는 경우 그 조건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하고 나머지를 유효로 할 수 있다.

22.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점유는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 ② 권리자가 권리의 존재를 몰랐다는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③ 2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권리는 확정판결이 있더라도 그 소멸시효가 단축되지 않는다.
- ④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은 위반행위를 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 ⑤ 공유물분할청구권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이므로 2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23. 소멸시효의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매매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약정한 대금지급일이 도래한 때부터 진행된다.
- ② 매수인이 목적부동산을 인도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 ③ 불확정기한부 채권의 소멸시효는 채무자가 그 기한이 도래하였음을 안 때부터 진행된다.
- ④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그것이 상행위로 인한 것이라도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 ⑤ 소멸시효기간은 변론주의의 대상이 아니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24.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시효중단이 효력을 미치는 승계인은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한 후 그 효과를 받는 권리를 승계한 사람을 의미한다.
- ②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도 재심을 청구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 ③ 물상보증인의 재산을 압류한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채권의 시효중단은 효력이 없다.
- ④ 재판상 채무승인은 신청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때부터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 ⑤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25. 소멸시효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당사자는 합의로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있다.
- ② 원본채권의 시효소멸은 이미 발생하여 양도된 이자채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③ 주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 이는 보증채무에 영향이 없다.
- ④ 소멸시효가 완성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채권자는 그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
- ⑤ 소멸시효가 완성한 후에 채무자가 이행기의 유예를 요청하는 것은 시효이익의 포기이다.

【 형사소송법 】

1.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무죄추정의 원칙은 수사를 하는 단계뿐만 아니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형사절차와 형사재판 전반을 이끄는 대원칙이다.
- ②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절차상의 영역에 한정되지 않으며, 입법·행정 등 국가의 모든 공권력의 작용에는 절차상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법률의 구체적 내용도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실제적인 적법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③ 실체진실주의는 형사소송의 지도이념이며, 이를 공판절차에서 구현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은 법원이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④ 형사소송의 구조를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중 어느 것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는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직권주의를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다.
- ⑤ 증거동의제도와 증인에 대한 교호신문절차는 당사자주의 요소이고,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와 피고인신문제도는 직권주의 요소이다.

2. 진술거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간이공판절차는 진술거부권 고지 이후에 그 개시 결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므로, 간이공판절차의 취소를 이유로 공판절차를 갱신하는 경우 피고인에게 다시 진술거부권을 고지할 필요가 없다.
- ② 진술거부권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고문 등 폭행에 의한 강요는 물론 법률로서도 진술을 강제할 수 없다.
- ③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
- ④ 피의자는 진술거부권, 자기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권리와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권리를 가질 뿐이고, 수사기관에 대하여 진실만을 진술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 ⑤ 진술거부권 고지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의 지위는 수사기관이 범죄인지서를 작성하는 등의 형식적인 사건수리 절차를 거치기 전이라도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 인정된다.

3. 甲은 강도범죄의 피의자로서 수사과정에서 乙의 성명을 모용하였고, 검사는 공소장에 乙을 피고인으로 표시하여 기소하였다. 이후 재판에서도 甲은 계속하여 乙의 이름으로 출석하다가 공판심리 도중 모용사실이 발각되었다. 한편 乙은 이러한 모용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일체의 소송절차에 전혀 관여하지 않아서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된 경우라고 할 수 없는 상태이다. 이 사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검사는 공소장변경절차를 통해 피고인 표시를 乙에서 甲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 ② 검사가 피고인 표시를 바로잡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공소제기의 방식이 무효인 것으로 보아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 ③ 공소장에 乙이 피고인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검사는 甲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乙에게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다.
- ④ 검사가 피고인 표시를 바로잡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甲에 대한 공소의 제기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 ⑤ 검사가 피고인 표시를 바로잡은 경우에는 법원은 甲에 대하여 심리하고 재판을 하면 되지 원칙적으로 乙에 대하여 심판할 것은 아니다.

4. 소송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반의사불벌죄에서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었더라도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결정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②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이 없거나 출석하지 아니한 채 공판절차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 공판절차가 위법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절차에서의 소송행위 외에 다른 절차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소송행위까지 모두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다.
- ③ 세무공무원의 고발 없이 조세범칙사건의 공소가 제기된 후라도 세무공무원이 고발을 하면 그 공소절차의 무효는 치유된다.
- ④ 피고인에 대한 공판기일 소환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소환장의 송달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그 밖의 방법에 의한 사실상의 기일의 고지 또는 통지 등은 적법한 피고인 소환이라고 할 수 없다.
- ⑤ 피고인이 즉결심판에 대하여 제출한 정식재판청구서에 피고인의 자필로 보이는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서명이 되어 있어 위 서류가 작성자 본인인 피고인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것을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다면, 피고인의 인장이나 지장이 찍혀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해당 정식재판청구는 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5. 고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친고죄에 관한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33조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이 소추조건으로 명시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도 유추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 ②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상해죄에서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로 공소장변경이 있는 경우 피해자가 항소심에서 처벌의사를 철회하였다면 법원은 피해자의 의사를 받아들여 폭행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
- ③ 고소권자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를 철회한다는 의사로 합의서를 제1심법원에 제출한 경우 그 후 피해자가 제1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합의를 취소하고 다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진술을 하였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고소는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다.
- ④ 친고죄의 공범 중 일부에 대하여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제1심판결 선고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그 고소를 취소할 수 없고, 그 고소의 취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은 발생되지 않는다.
- ⑤ 관련 민사사건에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제기한 형사 고소사건 일체를 모두 취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조정이 성립된 것만으로는 고소 취소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6. 「통신비밀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방송자가 인터넷을 도관 삼아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 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인 인터넷개인방송 플랫폼업체의 서버를 이용하여 실시간 또는 녹화된 형태로 음성, 영상물을 방송함으로써 불특정 혹은 다수인이 이를 수신·시청할 수 있게 하는 인터넷개인방송은 「통신비밀보호법」상 전기통신에 해당한다.
- ②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이라 함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 ③ 인터넷개인방송의 방송자가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등으로 비공개 조치를 취한 후 방송을 송출하는 경우 방송자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한 사람이 비공개 조치가 된 인터넷개인방송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시청·녹화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에 해당할 수 있다.
- ④ 인터넷개인방송의 방송자가 비공개 조치를 취한 후 방송을 송출하는 경우, 방송자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한 제3자의 시청·녹화 사실을 방송자가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방송을 중단하거나 그 제3자를 배제하지 않은 채 방송을 계속 진행하여, 그 제3자가 방송 내용을 지득·채록하였다면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한 감청에 해당한다.
- ⑤ 전기통신의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통신의 음향·영상 등을 청취하거나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7. 체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 기〉

- ㄱ.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아닌 자에 의하여 현행범인이 체포된 후 불필요한 지체 없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된 경우 현행범인을 구속하려면 체포시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 ㄴ. 사법경찰관리는 현행범인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체포자의 성명, 주거, 체포의 사유를 물을 수는 있으나, 체포자에 대하여 경찰관서 동행을 요구할 수 없다.
- ㄷ. 전투경찰대원들이 조합원들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체포의 이유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다가 30 ~ 40분이 지난 후 피고인 등의 항의를 받고 나서야 비로소 체포의 이유 등을 고지한 것은 「형사소송법」상 현행범인 체포의 적법한 절차를 준수한 것이 아니다.
- ㄹ.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경위 및 그에 관한 현행범인체포서와 범죄사실의 기재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논리와 경험칙상 장소적·시간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라면 그 체포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의 요건인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
- ㅁ.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에 영장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ㄷ, ㄹ
- ⑤ ㄹ, ㅁ

8. 구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도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 ② 공소장의 변경으로 인해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뿐만 아니라 관할이전으로 인해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도 피고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 ③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의하여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92조 제1항에 따라 2월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특히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2차(대법원이 「형사소송규칙」 제57조 제2항에 의하여 구속기간을 갱신한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구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 ④ 피고인이 수사 당시 긴급체포되었다가 수사기관의 조치로 석방된 후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법한 구속에 해당한다.
- ⑤ 구속영장에 기재된 횡령죄의 범죄사실과 공소장에 기재된 사기죄의 공소사실이 범행일시 및 장소, 범행의 목적물과 그 행위의 내용에 있어서는 같다고는 하지만, 그 영득행위에 대한 법적인 평가가 다르다면 아무리 그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더라도 구속영장의 효력이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볼 수 없다.

9. <보기>의 설명에 대하여 옳고(○) 그름(×)을 알맞게 표시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 기>—

- ㄱ.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의 범죄혐의를 이유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사법경찰리가 피고인의 주거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대마를 발견하자, 피고인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대마를 압수하였으나, 그 다음날 피고인을 석방하였음에도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경우 압수물과 압수조서는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 ㄴ. 압수의 대상을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 자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물건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과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 또는 동종·유사의 범행과 관련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압수를 실시할 수 있다.
- ㄷ. 압수·수색영장에서 압수할 물건을 ‘압수장소에 보관중인 물건’이라고 기재하고 있었다면 이는 ‘압수장소에 현존하는 물건’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 ㄹ. 피의자가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면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아닌 클라우드 등 제3자가 관리하는 원격지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를 수사기관에 제출한다는 의사로 수사기관에게 클라우드 등에 접속하기 위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임의로 제공하였다면 위 클라우드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ㅁ.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에 착수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하여 다시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앞서 발부 받은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다면 이를 제시하고 다시 압수·수색할 수 있다.

	ㄱ	ㄴ	ㄷ	ㄹ	ㅁ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
⑤	○	○	×	×	×

1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이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고위공직자범죄 및 관련 범죄의 공소제기와 그 유지를 수행한다.
- ②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 ③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3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④ 고소·고발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사는 수사처에 공소권이 부여된 사건을 제외한 고위공직자범죄등 사건의 수사를 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1. 재정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고발인은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제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제126조(피의사실공표)의 죄에 대하여만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 ③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검사 처분의 당부에 관한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할 만한 사건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 ④ 법원의 공소제기결정에 따른 재정결정서를 송부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지체 없이 담당 검사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하는데, 이 때 공소제기한 검사는 공판과정에서 무죄가 예상되는 경우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
- ⑤ 법원이 재정신청 대상사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채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보아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결정을 하였다면, 그에 따른 공소가 제기되어 본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안사건에서 이에 대한 잘못을 다룰 수 없다.

12. 공소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서 정한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는 범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한 경우에 한정되며, 범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 ②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③ 사기죄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예비적으로 배임죄를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이 된 경우에는 배임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완성여부는 본래의 공소제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④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자들이 사상에 이른 결과가 발생함으로써 그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 ⑤ 공소제기는 공소장이 법원에 도달한 때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공소장의 제출일자와 법원직원이 접수인을 찍은 날짜가 다르다면 공소장 제출일자를 공소제기일로 보아야 하나, 통상의 경우 공소장에 접수일로 찍혀 있는 날짜는 공소제기일로 추정된다.

13. 수사종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사법경찰관은 고소 또는 고발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② 검사의 불기소처분에는 확정재판에 있어서의 확정력과 같은 효력이 없어 일단 불기소처분을 한 후에도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면 언제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③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⑤ 검사의 재수사요청에도 사법경찰관이 기존의 불송치결정을 유지하는 경우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송치받아 수사할 필요가 있더라도 사건송치를 요구할 수 없다.

14. 공소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 기>—

- ㄱ. 포괄일죄인 상습사기의 공소사실에 있어서 그 범행의 모든 피해자들의 성명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다.
- ㄴ.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 공소장 기재의 방식에 대해 피고인측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공판절차를 진행한 결과 증거조사절차가 마무리되어 법관의 심증형성이 이루어진 단계에서는 이미 진행된 소송절차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
- ㄷ. 검사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두 개의 범죄 중 하나만을 기소하였다면 법원은 검사의 기소내용에 따라 당해 범죄로 처벌을 할 뿐 기소된 바 없는 다른 범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 ㄹ. 공소장변경절차 없이도 법원이 심리·판단할 수 있는 죄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인 경우에는 법원은 그 중 어느 하나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검사에게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에 관한 석명을 구하여 공소장을 보완하게 한 다음 이에 따라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① ㄱ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5. 법원의 관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관할법원이 법률상의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할 수 없는 때 또는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만 직근 상급법원에 관할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관련 사건이 A지방법원 단독판사와 B지방법원 합의부에 각각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은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개의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
- ③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한다. 다만, 각 법원에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은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있다.
- ④ 일반 국민이 범한 수 개의 죄 가운데 특정 군사범죄와 그 밖의 일반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특정 군사범죄에 대하여 전속적인 재판권을 가지는 군사법원은 그 밖의 일반 범죄에 대하여도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⑤ 단독판사 관할 피고사건의 항소사건이 C지방법원 합의부에 계속 중일 때 검사가 C지방법원에 치료감호청구를 하였고, 그 치료감호사건이 피고사건 항소심을 담당하는 합의부에 배당된 경우 그 합의부는 치료감호사건과 피고사건을 모두 관할권이 있는 고등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16. 피고인 출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한다. 단,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대리인을 출석하게 하여 개정할 수 있다.
- ②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피고인이 재판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고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고 변호인마저 이에 동조하여 퇴정해 버린 경우 수소법원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재정 없이 심리판결을 할 수 있다.
- ③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하므로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않는다.
- ④ 장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다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이 불출석허가신청을 하고 법원이 피고인의 불출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인정신문과 판결선고기일에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
- ⑤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

17. 증인신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 기>—

- ㄱ. 甲은 10년 전 이혼한 아내인 乙이 형사소추를 당할 염려가 있음을 이유로 증언을 거부할 수는 없다.
- ㄴ. 법원은 내란수괴 등 피고사건의 재판절차에서 甲과 乙이 내란 및 내란목적살인의 범죄사실의 피해자로서 피해자 진술신청을 한 경우 그 중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甲의 신청만을 받아들이고 乙의 신청은 기각할 수 있다.
- ㄷ. 공범인 공동피고인 甲은 당해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다른 공동피고인 乙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 乙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 ㄹ. 법원은 증인 甲이 불출석하자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그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재차 재판에 불출석하자 증인을 5일의 감치에 처하여 감치시설에 유치하였다. 감치 3일차 되던 날에 甲이 증언을 하였더라도 남은 감치기간이 경과해야만 석방된다.
- ㅁ. 재판장은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 甲을 일시 퇴정하게 하고 甲에게 실질적인 반대신문권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증인 乙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였고, 그 다음 공판기일에서 재판장이 甲에게 증인신문 결과 등을 공판조서(증인신문조서)에 의하여 고지하였는데 甲이 ‘변경할 점과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하였다면 실질적인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할 것이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 ④ ㄷ, ㅁ ⑤ ㄹ, ㅁ

18.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원은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이 아닌 통상재판에 의하여야 한다.
- ② 제1심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의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진행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는데, 항소심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묻고 안내서를 교부한 후 선고기일을 연기한 다음, 피고인이 답변서와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통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법원이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제1심 공판절차상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할 수 없다.
- ③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 ④ 유·무죄에 관하여 배심원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평결을 하지 않고 새롭게 배심원단을 구성한 후 공판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 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제1심에서 배심원이 만장일치로 한 평결 결과를 받아들여 강도상해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피해자에 대하여만 증인신문을 추가로 실시한 후 제1심의 판단을 뒤집어 이를 유죄로 인정한 경우, 항소심 판단에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원칙의 위반 및 증거재판주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19.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영장 없이 범행에 관한 증거를 보존하기 위한 필요에 의하여, 공개된 장소인 음식점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하여 음식점 내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볼 수 있었던 손님들의 춤추는 모습을 촬영하였다면 위법하다.
- ②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③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라면, 수사기관은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 ④ 비진술증거인 압수물은 압수절차가 위법한 경우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적용되어 그 압수물은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 ⑤ 피의자가 변호인의 참여를 원한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였음에도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지 아니한 채 피의자를 신문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20. 증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구성요건사실을 추인하게 하는 간접사실이나 구성요건사실을 입증하는 직접증거의 증명력을 보강하는 보조사실의 인정자료로서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 ②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대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하며 그 증명은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 ③ 뇌물죄에서 수뢰액은 다과에 따라 범죄구성요건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범죄구성요건이 되지 않는 단순 뇌물죄의 경우에도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 까닭에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하며, 수뢰액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 ④ 출입국사범사건에서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의 적법한 고발이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 되는 경우에 법원은 증거조사의 방법이나 증거능력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자유로운 증명으로 그 고발 유무를 판단하면 된다.
- ⑤ 횡령죄에 있어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21. 전문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 ②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실황조사서에 피의자이던 피고인이 사법경찰관의 면전에서 자백한 범행내용을 현장에 따라 진술, 재연하고 사법경찰관이 그 진술, 재연의 상황을 기재하거나 이를 사진으로 촬영한 것 외에 별다른 기재가 없는 경우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실황조사서에 기재된 진술내용 및 범행재연의 상황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면 그 실황조사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 ③ 현행범을 체포한 경찰관의 진술이라 하더라도 범행을 목격한 부분에 관하여는 증거능력이 있고,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행위를 도운 자가 경찰정보원인 경우 그 자가 범인의 범행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한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
- ④ 수사경찰 아닌 경찰관의 증언내용이 피고인이 경찰에서 피의자로서 조사받을 때 담당수사경찰이 없는 자리에서 자기에게 자백진술을 하였다는 내용이라면 이는 전문증거라고 할 것이므로 원진술자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면 이러한 증거들을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 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가 그 증거가 되는 경우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22. 자백보강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필로폰 매수 대금을 송금한 사실에 대한 증거는 필로폰 매수죄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필로폰 투약행위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 ②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
- ③ 피고인의 습벽을 범죄구성요건으로 하는 포괄일죄로서의 상습범에 있어서는 이를 구성하는 각 행위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보강증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 ④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상호 간에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 ⑤ 자동차등록증에 차량의 소유자가 피고인으로 등록·기재된 사실은 피고인이 그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사실의 자백 부분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무면허운전이라는 전체 범죄사실의 보강증거로 될 수 있다.

23. 항소심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제1심판결 선고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고인이 항소심 선고 당시 성년으로 된 경우 부정기형을 선고한 원판결을 파기하고 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 ② 이미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더라도 항소이유를 추가·변경·철회할 수 있으므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는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
- ③ 현행법상 형사항소심의 구조가 오로지 사후심으로서의 성격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어서 공소장의 변경은 항소심에서도 할 수 있다.
- ④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항소이유서의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에는 항소이유서의 제출기간 내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⑤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다음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 항소법원은 사선변호인에게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24. 재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유죄 확정판결 및 유죄판결에 대한 항소 또는 상고를 기각한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나, 면소판결을 대상으로 한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 ② 재심청구인이 재심의 청구를 한 후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 재심청구절차는 재심청구인의 사망으로 당연히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 ③ 재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재심청구 이유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을 조사할 수 있으며, 공판절차에 적용되는 엄격한 증거조사 방식에 따라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 ④ 재심심판절차에서 재심의 판결을 선고하고 그 재심판결이 확정된 때에 종전의 유죄의 확정판결은 효력을 상실한다.
- ⑤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 적용되어야 할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면, 해당 재심사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25. 약식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은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 고지일을 기준으로 하여 기산하여야 한다.
- ②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 ③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가 제기되었을 경우 법원이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검사에게 반환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면 공소장일본주의에 반하여 위법한 공소제기가 된다.
- ④ 약식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유죄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이에 대한 불복은 재심 또는 비상상고에 의한다.
- ⑤ 변호인이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할 것으로 믿고 피고인이 스스로 적법한 정식재판의 청구기간 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더라도 그것이 피고인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정식재판의 청구기간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못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 경제학 】

1. 기회비용과 매물 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고정비용과 매물 비용은 동일한 개념이다.
- ② 기회비용은 실제로 지출된 회계비용을 의미한다.
- ③ 기회비용은 어떤 선택으로 인해 포기해야 하는 여러 대안의 가치 중에 가장 작은 가치이다.
- ④ 모든 대안들의 편익이 동일하다면 기회비용이 가장 작은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⑤ 어떤 행위의 선택 여부를 결정할 때는 이미 지출된 매물 비용을 포함하여야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다.

2. 갑 기업이 하나의 생산 요소를 투입해 구두(X재)와 핸드백(Y재)을 만들 때, 두 점(X재 생산량, Y재 생산량) A(10, 20)와 B(15, 18)가 갑 기업의 생산 가능 곡선상에 있고 기회비용 체증의 법칙이 성립한다면 갑 기업의 생산 가능 곡선상의 점으로 가능한 것은?

- ① (8, 21) ② (10, 18) ③ (15, 20)
- ④ (18, 15) ⑤ (21, 16)

3. 독점 시장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 ㄱ. 독점 기업의 공급 곡선은 없다.
- ㄴ. 독점으로 인한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한다.
- ㄷ. 한계수입 곡선과 한계비용 곡선이 교차하는 점의 한계수입이 독점가격이 된다.

- ① ㄱ ② ㄷ ③ ㄱ, ㄴ
- ④ ㄴ, ㄷ ⑤ ㄱ, ㄴ, ㄷ

4. X재 시장의 수요 함수는 $Q_D = 100 - P$ 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P 는 X재의 가격, Q_D 는 X재의 수요량이다.)

<보 기>

- ㄱ. X재의 수요는 가격에 대해 비탄력적이다.
- ㄴ. X재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의 증가 함수이다.
- ㄷ. X재의 수요량이 75이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1이다.

- ① ㄱ ② ㄴ ③ ㄱ, ㄷ
- ④ ㄴ, ㄷ ⑤ ㄱ, ㄴ, ㄷ

5. X재와 Y재만을 소비하는 소비자의 무차별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x, y 는 각각 X재, Y재 소비량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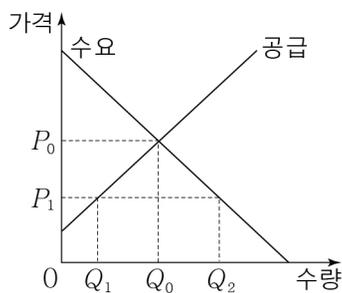
- ① 두 무차별곡선은 서로 교차하지 않는다.
- ② X재와 Y재 중 하나만 비재화라면 무차별곡선은 우상향한다.
- ③ 무차별곡선이 원점에 대해 볼록하다면 한계대체율은 체감한다.
- ④ X재가 Y재의 완전 대체재라면 원점에서 멀리 떨어진 무차별곡선일수록 더 낮은 효용 수준을 나타낸다.
- ⑤ 소비자의 효용함수가 $U(x, y) = 2x + y$ 라면, 무차별곡선의 기울기가 항상 일정하므로 한계대체율은 일정하다.

6. 다음은 축구복, 축구화, 축구공에 대한 고객 A, B의 최대 지불 용의 금액을 나타낸 것이다. 판매업자인 갑은 가격차별 없이 해당 상품을 따로 판매하거나 묶어 파는 전략 중 하나를 선택한다. 묶어 파는 전략을 선택한 경우, 축구복과 묶어 팔 때가 따로 팔 때보다 판매 수입이 더 큰 묶음 판매 조합과 이때 얻을 수 있는 최대 판매 수입으로 옳은 것은?

구분	최대 지불 용의 금액(만 원)		
	축구복	축구화	축구공
고객 A	10	15	4
고객 B	15	20	2

	묶음 판매 조합	최대 판매 수입
①	(축구복, 축구공)	28
②	(축구복, 축구공)	24
③	(축구복, 축구화)	60
④	(축구복, 축구화)	25
⑤	(축구복, 축구화)	14

7. 다음은 갑국의 X재 시장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갑국 정부는 P_1 에서 실효성 있는 가격 규제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가격 규제 정책 시행 전에 비해 생산자잉여는 감소한다.
- ② 가격 규제 정책 시행 전에 비해 $Q_2 - Q_0$ 만큼 시장 거래량이 증가한다.
- ③ 가격 규제 정책 시행 후에는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
- ④ 가격 규제 정책 시행 후에 공급의 감소가 발생하면 소비자잉여는 증가한다.
- ⑤ 최저임금제는 해당 가격 규제 정책의 사례이다.

8. 소비자가 X재를 x 만큼 소비하고 Y재를 y 만큼 소비할 때의 효용함수가 $U(x,y) = \sqrt{x} + \sqrt{y}$ 이다. 예산이 600이고 X재의 가격이 40, Y재의 가격이 20일 때, 소비자의 효용 극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비자의 효용 극대화를 위한 X재의 양은 5이다.
- ② 예산이 2배로 증가하면 최적의 소비점에서 소비자 효용도 증가한다.
- ③ 소비자 효용이 극대화되는 소비점에서의 한계대체율은 2이다.
- ④ 소비자의 효용 극대화를 위한 X재의 양과 Y재의 양의 합은 25이다.
- ⑤ 예산이 증가하면 소비자 효용이 극대화되는 소비점에서의 한계대체율도 증가한다.

9. 완전 경쟁 시장에서 단기 이윤을 극대화하는 기업의 단기 비용 함수가 $C = 450 + Q^2$, 시장 가격이 30일 때,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C 는 비용, Q 는 생산량이다.)

<보 기>

ㄱ. 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조업을 중단한다.
 ㄴ. 기업의 생산수준은 15이다.
 ㄷ. 총수입으로 가변비용을 모두 충당하고 있다.

- ① ㄱ ② ㄴ ③ ㄱ, ㄷ
- ④ ㄴ, ㄷ ⑤ ㄱ, ㄴ, ㄷ

10. 다음은 과점 시장에서 경쟁하는 기업 A와 기업 B의 전략 1, 2에 따른 성과보수 행렬을 나타낸 것이다. 기업 A와 기업 B 간에 담합이 없다면 우월 전략 균형에서의 조합(기업 A의 보수, 기업 B의 보수)으로 옳은 것은?

구분		기업 B	
		전략 1	전략 2
기업 A	전략 1	(10, 20)	(15, 4)
	전략 2	(4, 15)	(4, 10)

- ① (10, 20) ② (15, 4) ③ (4, 15)
 ④ (4, 10) ⑤ (10, 10)

11. 공공재에 대한 갑과 을의 한계편익 곡선은 각각 $P=10-Q$, $P=\frac{15-Q}{2}$ 이다. 공공재 생산의 한계비용이 10일 때 사회적 최적 생산량은?

- ① 4 ② 5 ③ 6
 ④ 7 ⑤ 8

12. 양식장 A의 한계비용은 $10x+70$ 만 원, 고정비용은 15만 원이다. 양식장 운영 시 발생하는 수질오염으로 인해 인근 주민이 입는 한계피해액은 $5x$ 만 원이고, 양식장 A의 한계편익은 100만 원으로 일정하다. 정부가 생산 1단위당 일정액의 세금을 부과하여 사회적 최적 생산량을 유도할 때 1단위당 세금은 얼마인가? (단, x 는 양식량이며, 소비 측면의 외부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 ① 5만 원 ② 10만 원 ③ 15만 원
 ④ 20만 원 ⑤ 30만 원

13. 피셔 방정식이 성립한다고 가정할 때 실질 이자율이 가장 낮은 것은?

	명목 이자율	예상 인플레이션을
①	0%	1%
②	1%	0%
③	2%	4%
④	3%	1%
⑤	3%	-2%

14. 화폐 및 화폐 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화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이자율은 하락한다.
 ② 이자율 상승은 화폐 보유의 기회비용 증가 요인이다.
 ③ 화폐는 가치척도의 기능, 교환 매개의 기능, 가치저장의 기능 등을 가진다.
 ④ 화폐를 보유하는 이유로 거래적 동기, 예비적 동기, 투기적 동기를 들 수 있다.
 ⑤ 화폐에 대한 수요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자산을 유동성 형태로 보유하고 싶어 하는지를 반영한다.

15. 다음은 X재와 Y재만을 생산하는 A국의 연도별 가격과 생산량을 나타낸 것이다. A국은 중간재 없이 두 재화를 생산하고 있으며 생산된 재화는 모두 판매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기준연도는 2020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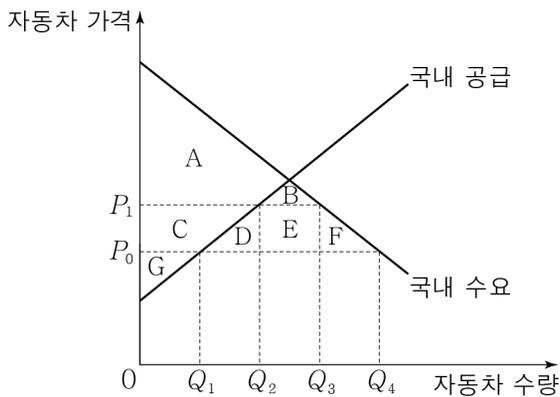
구분	X재		Y재	
	가격(달러)	수량(개)	가격(달러)	수량(개)
2020년	1,000	100	2,000	100
2021년	1,200	90	2,400	120
2022년	1,500	80	3,000	130

- ① 2020년의 명목 GDP와 실질 GDP는 같다.
 ② 2020년 X재 생산액이 명목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보다 작다.
 ③ 2022년 명목 GDP는 2021년보다 크다.
 ④ 2022년 실질 GDP는 2021년보다 크다.
 ⑤ 2022년 GDP 디플레이터는 2021년보다 크다.

16. 환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선물환율은 항상 현물환율보다 높게 결정된다.
- ② 구매력 평가설은 수출 규모를 측정하는 이론 모형이다.
- ③ 한국과 미국의 물가가 각각 3% 상승하고 명목환율이 변화가 없다면, 실질환율은 3% 상승한다.
- ④ 환율이 올라간 직후에는 순수출이 줄어들고 상당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늘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마셜-러너 조건이라고 한다.
- ⑤ 이자율 평가설이 성립한다면 한 국가의 금융 상품에 투자한 수익률은 환위험 헤징(hedging) 후 다른 국가의 금융 상품에 투자한 수익률과 동일하다.

17. 갑국 정부는 자국의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 단위당 $P_1 - P_0$ 만큼 관세를 부과하였고, 관세 부과 전의 국제가격은 P_0 이었다. 갑국 자동차 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갑국은 국제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자동차는 국제가격 수준에서 무제한 수입이 가능하다.)



- ① 관세 부과 전 갑국의 국내 소비량은 Q_4 이고, 생산량은 Q_1 이다.
- ② 갑국 정부의 관세수입은 E이다.
- ③ 관세 부과 후 갑국의 소비자잉여는 $A+B$ 이고, 생산자잉여는 $C+G$ 이다.
- ④ 관세 부과로 인한 갑국의 사회적 순손실은 $B+D+F$ 이다.
- ⑤ 관세 부과 후 갑국의 국내 생산량은 Q_2 이고, 국내 소비량은 Q_3 이다.

18. A국에는 2개의 은행이 있고, 지급준비율을 제1 은행은 20%, 제2 은행은 10%로 항상 유지한다. 甲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현금 100만 원을 제1 은행에 예금하였고, 제1 은행은 지급준비금을 제외한 금액을 전액 乙에게 대출하였다. 乙은 대출받은 돈을 모두 사용하여 丙에게서 물품을 구입하였다. 丙은 이 대금을 전액 제2 은행에 예금하였고, 제2 은행은 지급준비금을 제외한 전액을 丁에게 대출하였다. 이상의 거래에서 추가적으로 창출된 통화량은 얼마인가?

- ① 152만 원 ② 142만 원 ③ 132만 원
- ④ 122만 원 ⑤ 112만 원

19. 재정의 자동 안정화 장치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ㄱ. 경제정책의 내부시차를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ㄴ. 경기 회복기에는 경기 회복을 더디게 만들 수 있다.
 ㄷ. 이에 해당하는 사례에는 누진적 소득세제와 실업 보험 제도가 있다.

- ① ㄱ ② ㄴ ③ ㄱ, ㄷ
- ④ ㄴ, ㄷ ⑤ ㄱ, ㄴ, ㄷ

20. A국과 B국의 총수요와 총공급 변동에 따른 경제 상황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총수요 곡선은 우하향, 총공급 곡선은 우상향한다.)

A국: 총수요 곡선, 총공급 곡선 모두 우측으로 이동하였다.
 B국: 총수요 곡선은 좌측, 총공급 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하였다.

- ① A국은 물가가 상승한다.
- ② A국은 실질 GDP가 감소한다.
- ③ B국은 물가가 하락한다.
- ④ B국은 실질 GDP가 증가한다.
- ⑤ A국과 B국 모두 실업률이 상승한다.

21. 어느 한 국가의 기대를 반영한 필립스곡선이 다음과 같을 때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π 는 실제 인플레이션율, π^e 는 기대 인플레이션율, μ 는 실업률이다.)

$$\pi = \pi^e - 0.5\mu + 2.2$$

—<보 기>—

- ㄱ. 잠재 GDP에 해당하는 실업률은 4.4%이다.
- ㄴ. 잠재 GDP에 해당하는 실업률은 자연 실업률이 아니다.
- ㄷ.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면 장기 필립스 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 ㄹ. 실제 실업률이 5%이면 실제 인플레이션율은 기대 인플레이션율보다 낮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22. A국과 B국은 노동만을 사용하여 옷감과 포도주를 생산하고 있다. 양국은 비교우위에 따라 교역하며, 옷감과 포도주 각각 1단위 생산에 필요한 노동 투입량은 다음과 같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국가	옷감	포도주
A국	4	6
B국	16	8

—<보 기>—

- ㄱ. A국은 옷감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다.
- ㄴ. 포도주 1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은 B국이 A국보다 크다.
- ㄷ. 옷감 1단위와 포도주 3단위를 교환하는 조건이면 무역이 발생하지 않는다.

- ① ㄱ ② ㄴ ③ ㄱ, ㄷ
- ④ ㄴ, ㄷ ⑤ ㄱ, ㄴ, ㄷ

23. 다음의 거시경제 모형에서 완전고용 국민소득을 달성하기 위해 독립투자 수요를 얼마나 증가시켜야 하는가? (단, Y는 국민소득, C는 소비지출, I는 투자지출, Y_F 는 완전고용 국민소득이다.)

$Y = C + I$	$C = 200 + 0.8Y$
$I = 200$	$Y_F = 3,000$

- ① 1,000 ② 1,100 ③ 1,200
- ④ 1,300 ⑤ 1,400

24. 소규모 폐쇄경제인 A국의 X재에 대한 수요 곡선은 $Q^D = 500 - P$, 공급 곡선은 $Q^S = -100 + P$ 이고, 국제가격이 400이다. A국이 경제를 개방할 때 발생하는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Q^D 는 X재의 수요량, Q^S 는 X재의 공급량, P는 X재의 가격이다.)

- ① A국의 X재 공급량은 감소한다.
- ② A국은 X재를 수입하게 된다.
- ③ A국의 소비자잉여는 10,000이 된다.
- ④ A국에서 X재의 국내 거래량은 증가한다.
- ⑤ A국의 총잉여는 개방 전보다 10,000만큼 증가한다.

25. 갑국의 실업률은 2021년에 2020년보다 상승하였지만, 2022년에는 2021년과 같았다. 갑국의 고용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15세 이상 인구는 매년 증가하였고, 경제 활동 인구는 변함이 없다.)

- ① 2021년 취업자 수는 2020년보다 많다.
- ② 2021년 고용률은 2020년보다 상승하였다.
- ③ 2022년 고용률은 2021년보다 하락하였다.
- ④ 2022년 취업자 수는 2021년보다 적다.
- ⑤ 2022년 경제 활동 참가율은 2021년보다 상승하였다.

【 소방학개론 】

1. 기계포 소화약제 중 단백포 소화약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ㄱ. 유동성이 좋다.
 ㄴ. 내열성이 나쁘다.
 ㄷ. 유류를 오염시킨다.
 ㄹ. 유면 봉쇄성이 좋다.

- ① ㄱ, ㄷ
- ② ㄷ, ㄹ
- ③ ㄱ, ㄴ, ㄹ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2.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상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급수성 물질 중 지정수량이 다른 것은?

- ① 황린 ② 칼륨 ③ 나트륨
- ④ 알킬리튬 ⑤ 알킬알루미늄

3. 목조건축물 화재의 진행 과정에 관한 설명 중 <보기>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보 기>

연기의 색이 백색에서 흑색으로 변하며, 개구부가 파괴되어 공기가 공급되면서 급격한 연소가 이루어져 연기가 개구부로 분출하게 된다.

- ① 화재의 원인에서 무염착화
- ② 무염착화에서 발염착화
- ③ 발염착화에서 발화
- ④ 발화에서 최성기
- ⑤ 최성기에서 연소낙하

4. 분진폭발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분진의 발열량이 클수록, 휘발성분의 함유량이 많을수록 폭발하기 쉽다.
- ② 입자의 크기가 작고 밀도가 클수록 표면적이 크고 폭발이 용이해진다.
- ③ 열분해가 용이할수록, 기체 반응속도가 빠를수록 폭발하기 쉽다.
- ④ 알루미늄과 마그네슘 금속분진의 경우 분진 속 수분량이 증가하면 폭발성이 증가한다.
- ⑤ 평균 입경이 동일한 분진일 경우 분진의 형상에 따라 폭발성이 달라진다.

5. 고체 가연물의 연소 중 연소형태가 다른 것은?

- ① 목재 ② 종이 ③ 석탄
- ④ 파라핀 ⑤ 합성수지

6. 0℃, 1기압인 조건에서 프로페인(C₃H₈)의 완전연소 조성식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공기의 조성비는 질소(N₂) 79 vol%, 산소(O₂) 21 vol%이다.)

- ① 프로페인 1 mol이 완전연소하면 약 72g의 물이 생성된다.
- ② 프로페인 0.5 mol이 완전연소하는 데 약 2.5 mol의 산소가 필요하다.
- ③ 프로페인 44g이 완전연소하면 약 132g의 이산화탄소가 생성된다.
- ④ 프로페인 1 mol이 완전연소하는 데 약 23.8 mol의 공기가 필요하다.
- ⑤ 프로페인 0.5 mol이 완전연소하는 데 필요한 공기 중 질소의 양은 약 18.8 mol이다.

7.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소로 옳은 것은?

- ① 용기에 위험물을 옮겨 담은 일반취급소
- ② 이동저장탱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위험물을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 ③ 보일러, 버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
- ④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인 경우
- ⑤ 제4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에 저장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30만배 이상인 경우

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특별재난지역의 선포권자는 대통령이다.
-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 ③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위해서는 중앙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④ 지역대책본부장은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에 대해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를 요청할 수 있다.
- ⑤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는 경우에 중앙대책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9. 공기 중 가연성 가스의 연소범위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중 위험도가 가장 높은 가연성 가스는? (단, 위험도는 가연성 가스의 위험한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이다.)

가연성 가스	연소범위(vol%)
A	3 ~ 12.5
B	4 ~ 75
C	5 ~ 15
D	1.2 ~ 44
E	2.5 ~ 81

- ① A ② B ③ C
- ④ D ⑤ E

10. 상온에서 고체 상태로 존재하는 가연물의 연소 형태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 기>	
ㄱ. 표면연소	ㄴ. 분무연소
ㄷ. 폭발연소	ㄹ. 자기연소
ㅁ. 예혼합연소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ㄹ, ㅁ

11. 위험물 중 황린(P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제3류 위험물이다.
- ② 미분상의 발화점은 34℃이다.
- ③ 연소할 때 오산화인(P₂O₅)의 백색 연기를 낸다.
- ④ 물에 대해 위험한 반응을 초래하는 물질이다.
- ⑤ 백색 또는 담황색의 고체이다.

12.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스프링클러설비 방식은?

- 가압송수장치에서 유수검지장치 1차 측까지 배관 내에 항상 물이 가압되어 있고, 2차 측에서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까지 대기압 또는 저압으로 있다.
- 화재발생 시 감지기의 작동으로 밸브가 개방되면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까지 소화수가 송수되고,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가 열에 의해 개방되면 방수가 된다.

- ① 습식 ② 건식 ③ 부압식
- ④ 준비작동식 ⑤ 일제살수식

13. 「소방공무원법」상 근속승진과 계급정년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u>근속승진</u>	<u>계급정년</u>
① 소방사를 소방교로: 해당 계급에서 4년 이상 근속자	소방령: 14년
② 소방장을 소방위로: 해당 계급에서 7년 6개월 이상 근속자	소방준감: 6년
③ 소방위를 소방경으로: 해당 계급에서 8년 이상 근속자	소방경: 18년
④ 소방교를 소방장으로: 해당 계급에서 6년 이상 근속자	소방감: 5년
⑤ 소방경을 소방령으로: 해당 계급에서 10년 이상 근속자	소방정: 10년

14.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중앙소방조직의 변천 과정을 시간적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 ① 소방방재청 - 내무부 소방국 - 내무부 치안국 소방과 -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 소방청
- ② 소방방재청 - 내무부 치안국 소방과 - 내무부 소방국 -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 소방청
- ③ 내무부 소방국 - 내무부 치안국 소방과 -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 소방방재청 - 소방청
- ④ 내무부 경찰국 소방과 - 내무부 소방국 - 소방청 -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 소방방재청
- ⑤ 내무부 치안국 소방과 - 내무부 소방국 - 소방방재청 -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 소방청

15.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상 화재건수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1건의 화재란 1개의 발화지점에서 확대된 것으로 발화부터 진화까지를 말한다.
- ② 동일 소방대상물의 발화점이 2개소 이상 있는 지진, 낙뢰 등 자연현상에 의한 다발화재는 1건의 화재로 한다.
- ③ 동일 소방대상물의 발화점이 2개소 이상 있는 누전점이 동일한 누전에 의한 화재는 1건의 화재로 한다.
- ④ 동일범이 아닌 각기 다른 사람에 의한 방화, 불량난은 동일 대상물에서 발화했다라도 각각 별건의 화재로 한다.
- ⑤ 발화지점이 한 곳인 화재현장이 둘 이상의 관할 구역에 걸친 화재에 대해서는 소방서마다 각각 별건의 화재로 한다.

1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상 재난 및 사고의 유형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내륙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소방청
- ② 해외에서 발생한 재난: 외교부
- ③ 전력생산용 댐의 사고: 산업통상자원부
- ④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환경부
- ⑤ 해양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해양경찰청

1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사태 선포와 특별재난지역의 선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재난사태 선포는 재난의 대응 활동에 해당된다.
- ②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는 재난의 복구 활동에 해당된다.
- ③ 재난사태 선포권자는 국무총리이다.
- ④ 재난사태 선포대상 재난은 재난 중 극심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시·도지사가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재난사태의 선포를 건의하거나 중앙대책본부장이 재난사태의 선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장에 따른 쟁의행위로 인한 국가핵심기반의 일시 정지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 ⑤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재난경보의 발령, 인력·장비 및 물자의 동원, 위험구역 설정, 대피명령, 응급지원 등 이 법에 따른 응급조치,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비상소집, 해당 지역에 대한 여행 등 이동 자제 권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8. 재해원인 분석방법 중 하나인 4M 분석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재해의 원인을 Man, Machine, Manner, Management 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 ② 기계·설비의 설계상 결함은 관리적 요인에 해당한다.
- ③ 작업정보의 부적절은 작업·환경적 요인에 해당한다.
- ④ 표준화의 부족은 인적 요인에 해당한다.
- ⑤ 심리적 요인은 작업·환경적 요인에 해당한다.

1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상 해상에서의 긴급구조 및 항공기 등 조난사고 시의 긴급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해상에서 발생한 선박이나 항공기 등의 조난사고의 긴급구조활동에 관하여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 ② 해수면에서의 수난구조는 구조본부의 장이 수행하고, 내수면에서의 수난구조는 소방관서의 장이 수행한다.
- ③ 국방부장관은 항공기 조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항공기 수색과 인명구조를 위하여 항공기 수색·구조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④ 국방부장관은 항공기나 선박의 조난사고가 발생하면 관계 법령에 따라 긴급구조업무에 책임이 있는 기관의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군의 지원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⑤ 국방부장관이 설치하는 탐색구조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20. 폭굉(detonation)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폭굉은 급격한 압력의 상승 또는 개방에 의해 가스가 격한 음을 내면서 팽창하는 현상이고, 화염의 전파속도는 약 0.1 ~ 10 m/s이다.
- ② 압력이 높을수록 폭굉으로의 전이가 쉬운 조건이 된다.
- ③ 최초의 완만한 연소에서 격렬한 폭굉으로 발전하는 데 필요한 거리를 폭굉유도거리라 한다.
- ④ 폭굉유도거리가 짧아질수록 위험도는 커진다.
- ⑤ 환경이 가늘수록 폭굉유도거리는 짧아진다.

21. 발화점 및 최소발화에너지(MIE, Minimum Ignition Energy)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발화점은 발화 지연시간, 압력, 산소농도, 촉매물질 등의 영향을 받는다.
- ② 파라핀계 탄화수소는 분자량이 클수록 발화온도가 높아진다.
- ③ 최소발화에너지는 가연성 혼합기를 발화시키는데 필요한 최저에너지를 말한다.
- ④ 압력이 상승하면 최소발화에너지는 작아진다.
- ⑤ 발화점이 낮을수록 발화의 위험성은 커진다.

22. 폭발을 기상 폭발과 응상 폭발로 분류할 때, 폭발의 종류가 다른 것은?

- ① 분무 폭발
- ② 분진 폭발
- ③ 분해 폭발
- ④ 증기운 폭발
- ⑤ 증기 폭발

23. 소화원리 중 제거소화의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촛불을 입으로 불어 소화하는 방법
- ② 식용유 화재 시 주변의 야채를 집어 넣어 소화하는 방법
- ③ 전기화재 시 신속하게 전원을 차단하여 소화하는 방법
- ④ 산림화재 시 화재 진행 방향의 나무를 벌목하여 소화하는 방법
- ⑤ 가스화재 시 밸브를 차단시켜 가스공급을 중단하여 소화하는 방법

24. 물 소화약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물은 분자 내에서는 수소결합을, 분자 간에는 극성공유결합을 하여 소화약제로써의 효과가 뛰어나다.
- ② 물의 증발잠열은 100℃, 1기압에서 539 kcal/kg이므로 냉각소화에 효과적이다.
- ③ 물의 주수형태 중 무상은 전기화재에도 적응성이 있다.
- ④ 물 소화약제를 알코올 등과 같은 수용성 액체 위험물 화재에 사용하면 희석작용을 하여 소화효과가 있다.
- ⑤ 중질유화재에 물을 무상으로 주수 시 급속한 증발에 의한 질식효과와 함께 에멀션(emulsion) 형성에 의한 유화효과가 있다.

25.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소방시설의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보 기>—
- ㄱ. 소화설비: 소화기구, 스프링클러설비등, 연소방지설비 등
 - ㄴ. 경보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누전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등
 - ㄷ. 피난구조설비: 유도등,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비상방송설비 등
 - ㄹ. 소화용수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저수조, 그 밖의 소화용수설비
 - ㅁ. 소화활동설비: 비상콘센트설비, 제연설비, 연결살수설비 등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ㄹ
- ③ ㄱ, ㄷ, ㅁ
- ④ ㄴ, ㄷ, ㅁ
- ⑤ ㄴ, ㄹ, ㅁ